



2026년 8월 (2026.8.1.~8.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승인

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2026년 6월, 독일 연방참의원(Bundesrat)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Gewaltschutzgesetz) 개정안을 승인했다.¹⁾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서 5월 연방의회 투표 당시 좌파당(Die Linke)의 기권을 제외하고 모든 여야 정당이 해당 법안에 찬성해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 접근과 거주 감시를 위한 전자 감시 제도를 도입하고, 가해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잠재적 폭력 위험도가 높거나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의 준수 여부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위험 사례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상향될 수 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가정법원만 내릴 수 있으며, 고위험 사례에 한해 일시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일회성 결정에 그치지 않는다. 관계당국은 정기적인 관리와 심사를 통해 착용 및 감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위반될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이 있는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참고자료

- Die Bundesregierung (2026.6.12.), "Mit elektronischer Fußfessel gegen häusliche Gewal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haeusliche-gewalt-fussfessel-2394530> (접속일: 2026.8.16.).
- Frauenhauskoordinierung e.V. (2026.5.8.), "Bundestag ändert Gewaltschutzgesetz – FHK fordert weitergehende Maßnahmen," <https://www.frauenhauskoordinierung.de/aktuelles/detail/reform-des-gewaltschutzgesetzes-verabschiedet> (접속일: 2026.8.16.).
- Tagesschau (2026.6.12.), "Bundesrat billigt Fußfessel-Einsatz",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haeusliche-gewalt-fussfesseln-femizide-strafrechtsreform-100.html> (접속일: 2026.8.16.).

1) 연방의회(Bundestag)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고, 연방참의원(Bundesrat)은 16개 주 정부의 주 총리와 장관 등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여 연방의회가 심사 및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조정기관이 기존의 피해자 접근 금지 구역보다 넓은 범위에 '경계 구역(warning zone)'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부터 자동 경고를 발령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설정된 지리적 경계나 최소 거리 기준을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해자는 요청할 경우 해당 경보장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기술적 감시 장치와 휴대전화를 항상 소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관계당국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가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최고 법정형도 기존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도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폭력예방 교육(Anti-Gewalt-Kurse) 참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폭력예방 교육은 가해자의 공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본 개정안으로 전자발찌 장치를 통해 잠재적 폭력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관계당국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전자발찌 위치 추적 및 감시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자 감시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슈테파니 후비히(Stefanie Hubig) 연방법무부 장관(사회민주당, SPD)은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가정법원이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좋은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가정폭력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본 개정안에서 중점을 둔 전자발찌 감시 장치와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위험 관리 체계와 가족법 개혁 등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독일의 여성쉼터 조정협회(FHK, Frauenhauskoordination e.V.)는 포괄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보다 포괄적인 대응 체계로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고위험 관리 시스템과 평가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족법 개혁을 통해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보다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쉼터조정협회(FHK)의 시빌레 슈라이버(Sibylle Schreiber) 대표는 전자발찌 감시 장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법 및 면접교섭 절차에서 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여전히 가해자와의 접촉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정폭력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감시 장치의 전국적 도입을 제도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명시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아일랜드 Ireland

◦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 전략2025-2030」 첫 번째 실행 계획 발표

이지원 |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2026년 8월 5일 아일랜드 아동·장애·평등부 장관 노마 폴리(Norma Foley)는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전략 2025-2030(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25-2030)」의 첫 번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2025년 11월 발표된 국가전략의 목표를 구체적인 정부 정책과 사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 6개월간 추진된다. 이 기간의 실행 성과와 개선점은 이후 수립되는 두 번째 실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실행계획에는 전략목표별 구체적인 실행 조치와 산출물, 추진 일정, 담당 부처 및 기관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효과적인 이행과 성과 평가를 위해 전략 모니터링 위원회(Strategic Monito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정부 부처와 기업,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은 국가전략에 따라 ① 존재의 반영(Being Counted), ② 나답게 살아가기(Being Me), ③ 리더로 성장하기(Being a Leader), ④ 안전하게 살아가기(Being Safe), ⑤ 공정한 몫 갖기(Having a Fair Share), ⑥ 건강하게 살아가기(Being Well), ⑦ 지원받기(Being Supported) 등 7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182개의 세부 실행 조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교육·노동시장·정치 및 리더십·폭력과 안전·건강·돌봄·기후변화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이번 실행계획은 개별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 성인지 영향 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평등 데이터(equality data) 등을 정부의 정책 및 예산 결정 과정 전반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성평등 정책을 특정 분야의 개별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범정부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실행계획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접근을 명시적으로 채택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중첩된 차별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장애, 인종·민족, 나이, 가족 형태, 이주 여부, 지역적 특성 등 여성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은 성별과 결합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실행계획은 이러한 복합적인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여성의 경험과 필요를 정책의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개별 취약집단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불평등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는 접근이다.

참고자료

- gov.ie (2026.8.5.), "Minister Foley launches first Ac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press-releases/minister-foley-launches-first-action-plan-for-the-national-strategy-for-women-and-girls/> (접속일: 2026.8.18.)
- gov.ie (2026.8.5.),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Action Plans",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publications/national-strategy-for-women-and-girls-action-plans/> (접속일: 2026.8.18.)
- La Barbera, M., Espinosa-Fajardo, J., & Caravantes, P. (2023), "Implementing Intersectionality in Public Policies: Key Factors in the Madrid City Council, Spain", *Politics & Gender*, 19(3), pp. 675-702, doi:10.1017/S1743923X22000241.

- 교차성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 여성과 트래블러(Traveller)²⁾ 여성이 제시되었다. 장애 여성은 장애에 따른 차별과 성차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트래블러 여성 역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중첩되면서 건강·교육·주거 등에서 특수한 어려움을 겪거나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한 부모, 고령 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 여성, 농촌 지역 거주 여성, 청년 여성 및 소녀를 교차적 차별에 직면할 수 있는 집단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실행계획에는 공공부문의 성인지 영향 평가에 교차성 관점을 포함하고, 연구 및 평등 데이터에서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아일랜드의 첫 번째 실행계획은 여성과 소녀가 겪는 불평등에 정치·경제·교육·안전·건강·돌봄 등 개별 영역에서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결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려는 범정부적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교차성 접근을 통해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고려하고, 성주류화·성인지예산·성인지 영향 평가 및 평등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다만 교차성 개념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의 부재, 해석의 불일치, 관련 교육의 부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교차성 접근이 특정 집단을 단순히 추가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 담당자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교차적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성과지표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일랜드가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교차성을 성인지 영향 평가에 반영하고, 평등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실행 조치별 담당 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명시한 것은 교차성 접근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체계가 실제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지고, 특히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과 소녀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아일랜드 트래블러(Irish Traveller) 공동체는 아일랜드 섬에서 유목 생활을 포함하여 공유된 역사, 문화, 전통을 지닌 독자적인 집단으로서 법적,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토착 소수 집단이다. 정착 생활을 하는 아일랜드 인구와 유전적, 문화적으로 구별되며, 2017년 아일랜드에서 공식적으로 별도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다.



덴마크 Denmark

◦ 여성 과반으로 구성된 덴마크 신임 내각에 대한 평가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은 2026년 6월 3일 덴마크 역사상 최초로 여성 장관이 남성보다 많은 신임 내각을 발표했다. 신임 내각은 사회민주당, 사회주의인민당,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자유당, 그리고 중도당 간의 소수 연립정부로 구성되었으며, 총 21명의 장관 중 11명이 여성이다. 새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른 정당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상징적 대표성을 갖춘 내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향을 살펴보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표한 점에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당 내각의 구성, 정책적 성격과 이념을 상세히 살펴보고, 상징적 대표성과 달리 실질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내각으로 보기에는 한계를 갖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새 연정은 선거 직후 현 총리의 좌파 연합 구성 시도와 자유당을 주축으로 한 우파 연합 구성 시도가 모두 실패한 뒤, 세 번째 시도 만에 성립되었다. 이렇게 소수 연립정부의 수장으로서 총리직 3연임을 시작한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은 신임 내각 구성을 발표하면서 덴마크 국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현 총리는 이러한 지향을 내세우며 내각을 여성 과반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 내용으로는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하는 방안과, 소득이 낮은 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월 1,000덴마크크로네(약 200,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 방식은 새 정부가 전체 의회 179석 중 82석만을 확보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의회 과반을 확보하려면 좌파 성향 적녹연합(Red-Green Alliance)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무상 치과 치료 제공, 22세 이하 국민에게 무료 대중교통 제공과 같은 정책적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도당 대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에 따르면, 새 정부의 기조이자 목표는 “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이며 격동의 시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현 총리가 미국과의 그린란드 문제 대립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국내 생활비 위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 강령에서 제외된 내용들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먼저 현 강령에는 부유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아젠다는 선거 운동 기간 현 총리가 제안한 바 있으나 기업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이번 강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총리는 덴마크의 강경한 전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은 이러한 이민 정책 기조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따라서 더 많은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속되어온 망명 신청자 수용 센터 설치 작업은 유지하며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그곳에 체류하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참고자료

- Courthouse News Service (2026.6.3.), “Denmark’s Frederiksen opens third term with women-led coalition”, <https://www.courthousenews.com/denmarks-frederiksen-opens-third-term-with-women-led-coalition/> (접속일: 2026.8.10.)
- Reuters (2026.3.17.), “Mette Frederiksen, Denmark’s Trump-defying prime minister, seeks third ter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mette-frederiksen-denmarks-trump-defying-prime-minister-seeks-third-term-2026-03-17/> (접속일: 2026.8.13.)
- The Hindu (2026.6.3.), “Denmark PM presents new government, with majority of women”,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denmark-pm-presents-new-government-with-majority-of-women/article71058355.ece> (접속일: 2026.8.11.)
- The Guardian (2026.6.2.), “New Danish government vows to resist Greenland pressure and tackle cost of living”,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un/02/new-danish-government-resist-greenland-pressure-cost-of-living> (접속일: 2026.8.10.)

 특히 비서구권 출신의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망명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던 극우 세력의 기세를 꺾었으나, 동시에 전통적인 좌파의 지지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앞으로 적녹연합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과의 협상을 통해 의회 과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 예컨대 적녹연합의 대표 펠레 드라그스테드(Pelle Dragsted)는 인권 협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인세 인하와 최고 소득세율 구간 폐지 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불평등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반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번 내각은 여성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여성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내각의 성별 구성과는 별개로, 덴마크의 현 정치 구조와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강화된 안보 기조, 국내 경제 상황의 해결 등 복합적인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연합(coalition)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면서 새 내각에서 어떠한 의제들이 다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Australia

호주 빅토리아주, 데이터로 추적한 공공부문 성평등법 5년 성과와 과제

조혜인 | 모나시대학교 Intercultur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빅토리아 주정부(멜버른 소재)는 2020년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 2020)」을 제정해 공공부문 조직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지방정부단체, 국공립병원 등 약 50인 이상 규모의 약 300개 공공기관은 직장 내 성평등 지표에 관한 자료를 공공부문 성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Gender Equality in the Public Sector, 이하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성평등위원회는 2021년, 2023년, 2025년 빅토리아주 내 약 300개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5년간의 변화와 추세를 분석한 「빅토리아주 공공부문 성평등 현황(State of Gender Equality in Victoria's Public Sector 2026)」을 2026년 8월 1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성평등에 관한 단발적인 설문조사나 성평등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집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일한 조직을 대상으로 약 50만 명의 급여 데이터와 이사회와 성별 구성 현황,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신고 자료, 채용 결과 등을 수년간 추적해 축적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빅토리아주의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력의 약 12%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의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 고용주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변화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빅토리아주 전체의 직장 문화와 고용 관행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닉키 빈센트(Nikki Vincent)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성평등 목표에 ‘도달’했다기보다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의 고위직 진출 비율이 증가했으며, 11개 분야 가운데 4개 분야에서는 고위직 여성 비율이 해당 분야의 여성 고용 비율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3년에는 이러한 분야가 2개에 불과했다. 경찰과 응급서비스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입이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더 많은 여성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센트 위원장은 이를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데이터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별 기관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과 직종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이후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성별 직업 분리(gender segregation)는 여전히 임금 격차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 Commission for Gender Equality in the Public Sector [CEGEPS]. State of gender equality in Victoria's public sector 2026. CGEPS. <https://www.genderequalitycommission.vic.gov.au/state-gender-equality-victorias-public-sector-2026> (접속일: 2026.8.19)
- Jacky Watt and Hyein Cho (2024), 직장 내 성평등 증진과 개선: 호주 공공 부문의 성평등 정책 프레임워크. KDWI Brief. <https://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2&idx=132580> (접속일: 2026.8.19)
- Jacky Watt and Hyein Cho (2024), 직장 내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적용: 빅토리아주의 성평등법 시행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DWI Brief. <https://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2&idx=132581> (접속일: 2026.8.19)

 돌봄을 둘러싼 성별 격차도 뚜렷하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은 평균 5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남성의 평균 사용 기간은 1주에 그쳤다. 이는 직장 내 여성의 대표성과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돌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앞으로 공공부문이 직면할 환경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빈센트 위원장은 현재 공공부문이 인력 감축과 예산 압박, 인공지능의 빠른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과 업무 방식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성별 불평등이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돼 오히려 더욱 고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절차와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이를 바로잡기보다 처음부터 제도 설계에 성평등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변화가 더뎠던 분야에서 진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찰과 응급서비스 등 여성의 진출이 제한적이었던 분야에서도 성별 직무 분리가 완화될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변화가 저절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의무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 보고 체계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각 기관에 지속적인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5년 전만 해도 빅토리아주에서는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임금, 리더십, 성적 괴롭힘, 돌봄 등 다양한 영역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성과 역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한편,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토리아주의 지난 5년은 성평등의 진전과 지속을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제도적 책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